

코로나 19 전후의 평양: ‘숫자’와의 전쟁

Online Series

2020. 9.15. | CO 20-24

강 채 연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은 지금 숫자와 전쟁 중이다.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국의 공장기업소, 농촌, 기관 단위에서 인민경제계획과 자력갱생의 현물평가를 놓고 숫자와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인민경제계획, 자립경제를 위한 국산화(주체화)·개건확장(현대화)·컴퓨터화(정보화)·질적 개선(과학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한 책임이다. 앞서 지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주목한 부분은 2018년 이후 북·미 협상 침체·대북제재·코로나 19라는 3대 악재에 따른 경제성과의 미진을 인정한 것이다. 계획경제가 일반적으로 계획숫자에 의한 통제, 혹은 그 결과라고 볼 때, 경제실패의 원론적인 의미는 이른바 ‘숫자의 실패’다. 그러나 북·미 협상 이후 북한경제의 발전전략과 경로를 추적해볼 때, 경제실패의 실제적 의미는 산업 전반에서의 체질개선 정책, 즉 지식 기반 산업 생태계로의 이행전략에 따른 질적 부진에 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전후로 내각사업에서는 산업정보화체계로의 전환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전후 산업정보화체계로의 전환 모색: ‘숫자경제’

2019년 6월부터 북한에서 ‘숫자’가 애국이고 증산이고 충정이라는 메시지가 등장한다.¹⁾ 신발의 무게를 줄이는데도, 원료·노력 절약에도, 생산·경영·노동의 양과 질에서도, 제품의

1) “수자와 애국,” 『노동신문』, 2019.6.6; “수자의 무게,” 『노동신문』, 2019.7.6.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도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숫자 중시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논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²⁾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2020.4.12)를 앞두고 ‘숫자경제’의 구축은 인적·물적 자원의 최적화 수단이고 경제발전의 핵심목표라고 강조했다.³⁾ 이어 최근까지도 증산절약과 재자원화의 과학기술적 지도에 따른 기업전략·경영전략의 최적화는 숫자 중시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숫자경제는 한마디로 정보·지식·교환·지능 등이 결합되고 정보처리기술·자료기저기술·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경제구조와 환경을 의미한다. 북한은 숫자경제의 이점으로 △개별 기업체들에 대한 과학적 통제(계획화·생산·경영실태의 실시간 장악), △상호 유기적 연계에 의한 산업구조로의 전환(과학기술제품들 사이, 생산 공정들 사이, 업무방식들 사이 등)을 제시한다. 지식과 정보의 신속하고 빠른 확보·보급·공유가 인재·노력·기술·재정·원료·자재·유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다. 이는 전체적으로 산업정보화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산업정보화체계로의 전환은 지식경제정책의 산업 부문으로의 확대다. 이제 산업 간 과학기술적 연계와 정보공유, 경영관리의 컴퓨터화가 △원료·연료·자재·설비의 국산화, △자원·노력·원가절약과 재자원화정책, △생산 환경 개선, △제품의 질과 신뢰성 보장, △과학적 통제·통제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2020년 북한경제가 추구했던 지식경제의 주요 목표는 △생산 활동에서 통합생산체계(자동화, 현대화, 다기능화, 숫자화)의 확립, △경영활동에서 최적의 관리체계(지능화, 정보화, 자동화, 기계화)의 확립이다. 정보·과학기술적 생산·경영체계를 갖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2019년 이후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각 중심의 경제지도 관리와 체계개선의 기본 과제는 산업정보화시스템의 구축으로 보인다. 기업체들의 생산·경영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IT경영시스템의 구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은 아직 연합기업소 규모의 특정 기업이나 성·중앙기관, 도·시 인민위원회 일부 행정경제업무에만 국한된 상태다. 대학 및 중앙급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에서 각종 정보화체계, 과학기술지식, 관련 응용프로그램들을 보급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업들의 재정이나 투자여건, 생산 환경, 기업생태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적용조차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내각 관리체계의 부실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코로나 19를

2) “경제 분야의 새 론조,” 『조선신보』, 2019.8.5.

3) “인민경제발전에서 수자경제의 역할,” 『노동신문』, 2020.4.8.

전후로 김정은 위원장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내각사업의 문제점은 바로 기업체들의 과학기술적 생산 활동과 정보관리 체계에 대한 통일적 지도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북미협상·대북제재·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이 오히려 산업정보화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예측을 낳는다.

북·미 협상 이후 북한경제의 발전 프레임: 대응-총력-돌파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내세운 <지식경제>는 북한경제의 체질변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식경제정책은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정보의 공유, 보급, 확산 방식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산업 전반에 이식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였다. 나아가 생산, 경영, 관리를 비롯한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산업 간, 기업 간 불균형과 비생산적 구조, 부실경영, 관리체계의 문제가 북한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2013년 경공업 부문의 국산화정책이 평양, 원산,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식품, 의류, 화장품의 브랜드화를 이끌면서 시장에서의 중국의존성을 일정부분 감소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18년 이후 북미 협상 국면은 북한 산업 전반에서 과학기술적 체질개선을 전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2018.5)>다. 북한은 <혁명적 대응전략(2018.4)>을 내세우고 북미회담 성공 여부에 따라 국내투자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 브랜드화·다종화·자동화·현대화에 앞장 선 기업들(김정숙방직공장이나 신의주화장품공장, 원산신발공장 등)의 본보기가 전국의 경공업 공장들로 확대됐다. 국가적으로 화력탄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기관기업소·단체·가정 단위로는 에너지생산체계의 다종화(중소형수력발전소, 석탄가스화, 생물질, 태양열, 풍력)가 전 사회적 과제로 전개되었다. 평양시를 시작으로 시·군들에는 각 도를 대표하는 기초생활 인프라(김치공장·샘물공장·온실·양어장·보건산소공장·양로원·양생원·식품가공공장)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를 토대로 <정면돌파전(2020)>에서는 사회주의상업봉사체계의 긴급 복원을 강조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상업봉사체계의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지방경제의 분권화 신호로 풀이된다.⁴⁾

4) 사회주의 상업봉사체계의 복원은 계획화·조직화된 상품공급체계(소비품공급·사회급양·편의봉사·수매사업)의 복원을 의미한다.; 김봉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에 관한 사상,” 『경제연구』 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p. 4.

<자립경제총력노선(2019)>을 내세운 이후 북한 경제정책에서는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북미협상과 대북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자립경제의 기둥인 산업구조의 관행적 생산체계에 대한 수정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경공업 부문의 국산화·현대화·정보화 열풍이 산업현장들로 확산되고, 전략 부문 핵심 기업들의 생산구조 개선을 위해 연관 기업들의 현대화가 필수과제가 됐다. 심지어 발전소·관광지대 건설, 간석지 개간, 물길공사와 같이 굵직굵직한 대상건설들조차도 기계화·현대화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전통적 노력동원에서 현대적 기계장비 도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는 다시 기계공장들의 현대화 요구로 이어졌다. 나아가 산업 간 정보공유, 대학·연구기관들과의 정보·기술 전달체계,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 기업체들 간 경쟁력, 경제담당책임자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총력’과 ‘돌파’에 따른 총동원령과 산업구조의 체질개선 정책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속에서 내각이나 기업체들의 몸과 마음이 바쁜 데 비해 오히려 그에 따른 생산체계와 통제 무질서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2019.12.29-31)에서 산업부문들에서의 ‘폐단과 지지부진’ 상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데 대한 문제, 제7기 제6차 전원회의(2020.8.19)에서 경제사업이 개선되지 못한 문제, 등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한다.

경제실패의 구조적 요인: ‘숫자통제’의 이중구조

위에서 제기한 것처럼 경제실패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대북제재나 코로나 19와 같은 대외적 요인 외에도 국내 경제사업 개선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 이는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 부문에 대한 현대화·정보화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각 사업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사실상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개선 문제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바로 ‘숫자통제’다. 예컨대 경공업 부문의 국산화정책이 일반화되는 것과 함께 한편에서 질적 문제가 도마에 오르거나, 경제 관료들의 형식주의·보신주의·요령주의 사업방식의 배경에는 보통 ‘숫자통제’가 있다.

사회주의 기업체들은 계획경제의 양적지표와 함께 현대화·국산화·재자원화와 같은 수시 계획과 숫자에 대해 당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거부감이나 계획화의 양적지표에 치우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원칙은 기업의 자율성이고, 생산과 경영(원료·자재·금융·노력관

리 등)의 자율성이다. 이러한 자율성도 기업 간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 많은 기업들은 수학적·통계적 관리(규격화, 지표관리, 재정통제 등) 체계마저 부재하다. 대부분의 공장·기업소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정책과제와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는 동안, 투명한 숫자는 사라진다. 그리고 질적 문제가 정면에 드러난다. 결국 계획의 초과수행자들과 기업의 혁신성과, 국산화의 자릿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 경제효과는 상대적이다. 해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는 전년도 인민경제계획 수행은 전체 산업 부문에서 100% 이상 초과 완수다. 2019년도 마찬가지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성과 미진을 공식화했다.

결국 경제실패의 구조적 요인은 ‘숫자통제’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다. 우선 기업체들의 인민경제계획과 수시계획 간의 충돌, 이에 따른 내각의 정보화 지도관리 체계의 부재이다. 다음으로 계획경제의 모델링도 문제다. 계획경제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본보기 기업이 출현하면, 그것이 곧바로 경제 전반에 일반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계획숫자 외에도 수시로 하달되는 정책의 바다 속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속수무책이거나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계획수행, 거짓보고와 같은 현상유지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내각이 이러한 기업체들의 속성을 신속 정확하게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각총리 교체와 2021 경제발전계획의 방향: ‘숫자의 반전’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경제의 쌍두마차는 박봉주(2013.4.1-2019.4.11)와 김재룡(2019.4.11-2020.8.14)이었다. 김재룡은 재임기간 62회에 걸쳐 전력, 금속, 기계, 과학부문과 연관기업들에 대한 현지요해(과약)를 통해 현대화, 개건확장, 생산수량문제, 기업혁신 등을 강조해왔다. 동 기간에 박봉주는 48회에 걸쳐 화학, 농업부문과 연관기업들을 지도하면서 당면한 농업생산과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준비해왔다. 박봉주는 약 40년간에 걸쳐 화학·경공업 부문에서 수많은 현장경험과 행정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경제일꾼이다. 김재룡의 재임기간 북한경제는 총력과 대응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경제지도에서 혁신과 변화의 숫자는 보이지 않았다. 새로 임명된 김덕훈은 전력·금속공업부문의 주요 설비들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에서 계획경제의 예비숫자-통제숫자-계획숫자 조정 단계를 모두 총괄했던 인물(인민위원회 위원장, 내각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로 숫자에 상당한 전문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숫자경제의 구조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김덕훈 내각총리의 임명은 결국 질적 숫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이 있다. 경제 전반에서의 과학적 통계, 정보화 추진, 분권화의 방향과 숫자에 대한 책임기준이 분명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는 과정으로서의 결과다. 무수한 데이터에 수학적 결과로서 보여주는 종합적 데이터인 동시에 상대적 결과로서의 숫자가 주는 의미도 중요하다. 지금 북한은 그러한 과정과 결과로서의 질적 숫자에 목말라있다. 그리고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체질개선의 우선 순위가 과학적 숫자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 구축이 내각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부문별·지역별·단위별(기업체별)·단계별 현대화·정보화 추진계획과 세부 과제들이 5개년 계획의 양적지표에 앞선 핵심계획으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상업봉사체계의 복원을 위해 각 도를 대표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건설 성과들이 앞으로 각 시(군·구역)를 대표하는 인프라 건설·구축 계획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의 분권화 정책들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분명 ‘숫자통제’보다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의한 과학적 ‘숫자의 반전’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선진과학기술의 접목을 위한 경제 관료들의 질적 노후화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재들이 내각의 행정, 경제 부문에 빠르게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정보 및 기술협조가 시급하다. 북한이 추진하려는 산업구조의 체질개선과 지방경제복원, 분권화는 과학기술적 투자와 정보의 교환을 통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기술무역과 교류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방식은 북한의 부문별·지역별 경제정책의 추진구조와 방향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 산업의 체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어야 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